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4명 추가인정

환경부, 피해자 총 522명으로 증가

천식 중증도 · 임상경과 지원시 반영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와 천식 질환 피해자 54명이 추가 인정되면서 정부 구제 대상자는 522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질환과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서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수는 폐질환 431명, 태아피해 24명, 천식피해 71명 등 522명(폐질환·태아피해 중복 인정자 1명+폐질환·천식 중복 인정자 3명)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854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인정신청자 4748명 가운데 9.1% 수준인 431명이 정부 지원금인 구제급여를 받게 된다.

2011년 11월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이후 이번 4차 조사 때까지 지난달 4월30일 기준으로 폐질환 조사·판정 신청자 6014명 중 완료된 인원은 79%가량인 4748명이 됐다.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재심자 20명 포함 1140명 중 41명에게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정해졌다. 339명에 대해선 추가 자료 확보 후 조속히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태아피해는 51명 중 47.1% 정도인 24명(폐질환 2단계 1명, 3단계 5명, 4단계 2명, 5단계 3명, 미판정 13명)에 대해 피해 인정이 완료된 상태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등급안'을 의결해 등급 산정 때 입원내역, 약물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천식 중증도나 임상경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천식은 악화나 안정 시 폐기능에 차이가 있어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남게 되는 장해를 구분해 판정하기 위해서다.

이에 환경부는 천식피해 인정기준, 피해등급 등을 상반기중에 고시하고 신규 신청을 받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는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천식과 관련된 기준 등은 고시 작업을 마무리해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국립공원 시설 '노쇼족' 최대 3개월까지 이용제한

오는 7월부터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예약부도) 행태를 보인 사용자는 최대 3개월까지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예약부도를 낮춰 다수 사용자에게 이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7월1일부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는 1개월, 2회 이상은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 이용이 일시 제한된다. 관련 기록은 1년 이내 추가 예약부도 사실이 없을 경우에만 소멸된다.

이용제한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과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 등이다. 공단은 시설 사용 5일 전 이용내역을 문자로 안내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미리 취소할 수 있도록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예약부도 건수는 대피소 14곳에서 2만2522건, 야영장 31곳에서 1만997건에 달한다. 예약부도율은 각각 14.8%와 7.2%였다.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는 2014년 7196건(대피소 3455건, 야영장 3741건)에서 지난해 1만325건(대피소 5221건, 야영장 5105건)으로 43% 이상 늘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공실률은 대피소 17.6%, 야영장 10.2%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국립공원 대피소의 예약부도율은 평균 15% 수준으로 특히 양폭(26.7%), 중청(19.6%), 소청(19.1%) 등 설악산 대피소의 예약부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고 공단은 전했다.

뉴시스

차 예절을 배우다 13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자경전에서 시민들이 다례체험을 하고 있다.

경찰, 인권보호대책 '사후 구제→사전 최소화'로

소극적 절차 준수서 사전 예방으로 제도화

경찰이 인권규칙을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 시스템으로 바꾼다.

경찰청은 오는 14일부로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 기준을 정립하고 인권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전면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인권규칙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근거를 마련해 경찰의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주요 치안 정책과 계획은 물론 집회 및 시위 대응에 이르기까지 인권침해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인권영향평가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갈등이나 차별의 소지를 애초에 없애는 방침이다. 사후 구제와 소극적 절차 준수에 머물렀던 인권보호 대책을 사전에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제인권규약기구의 각종 권고 사안에 대해 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불수용 이유의 타당성을 검토해 청장에게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또 현장 경찰관의 인권 감수성 함양과 인식 제고를 위해 토론식 인권교육을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모든 활동에 인권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경찰행정 전반을 재설계하고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홈페이지 : www.i-honam.com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5

인도네시아서 동시 폭탄테러 최소 8명 사망

인도네시아 제2도시인 수라바야에서 13일 오전 최소 3곳의 교회를 겨냥한 동시다발 폭탄테러가 발생해 최소 8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일부는 상태가 심각해 추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카르타 포스트 등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경찰 대변인은 이날 오전 7시 15분 교회 3곳에서 동시에 폭탄이 터졌다. 폭발은 일요일 아침 예배 중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라바야의 모든 교회를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경찰 대변인은 "사상자들의 신원을 확인 중이며 가능한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누가 저질렀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 인구 중 이슬람 신도는 약90%,기독교 신도는 약10% 이다. 수라바야는 동자바주의 주도로, 인구는 약 270만명이다.

정부는 최근들어 자국 내에서 확산되는 이슬람 극단주의를 막기 위해 치안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인터넷을 통한 이슬람 극단주의와 가짜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이버 대응 전담기인 국가사이버암호청(BSSN)을 신설하기도 했다.

프랑스 파리 시내서 흉기공격 2명 사망

프랑스 수도 파리 시내에서 12일(현지시간)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 2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당국이 밝혔다.

당국은 이날 밤 용의자 남성이 파리 2구역에서 행인을 대상으로 흉기를 마구 휘둘러 최소한 1명을 살해하고 중상자 2명을 포함해 4명을 부상시켰다고 전했다.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제압당한 용의자도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당국은 설명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예리한 흉기를 범행을 했다고 확인했지만 범인 신원이나 동기, 사건 경위, 테러 가능성 등 자세한 사항에 관해선 언급을 피했다.

제라르 콜롱 프랑스 내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건을 "잔인무도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파리는 지난 수년간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잇단 테러 공격으로 고도의 경계 상태 속에 놓여있다.

앞서 지난 3월23일에는 남부 트레브의 슈퍼마켓에서 인질극이 벌어져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 총격에 숨졌다.

프랑스 내무부는 용의자가 26세 레두안 라크딤이며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며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IS의 전사'가 트레브에서 인질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테슬라 자율주행차, 유타주서 추돌 사고

자율주행장치를 장착한 테슬라 승용차 한 대가 11일(현지시간) 유타주의 한 도로에서 빨간 신호등 앞에서 정지해 있는 소방트럭을 추돌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은 사고 당시 자율주행장치로 운행중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솔트레이크 시티 교외에 있는 사우스 조던의 경찰은 그 날 저녁에 사고를 낸 차량은 테슬라 모델 S 승용차이며 이 차가 왜 정지해있는 소방장비 트럭을 추돌했는지는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테슬라 운전자는 발목 골절의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최근 잇따라 일어난 테슬라 자동차 사고 때문에 이 회사의 자율주행 시스템의 작동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돌 당한 소방장비 트럭의 운전자는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사우스 조던 경찰의 새뮤얼 윙클러 대변인은 말했다. 그는 테슬라 운전자가 (약물이나 알코올등) 어떤 물질의 영향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가 사고 경위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14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당시 도로에는 가랑비가 내려서 도로면이 젖은 상태였으며 "현장의 목격자들은 테슬라 모델 S가 추돌 전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장치는 속력에 맞춰 카메라, 레이다, 컴퓨터 장치를 사용해 차선을 변경하거나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이다. 캘리포니아주 팰로 앨토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네바다주 리노 시에 거대한 배터리 공장을 두고 있다.

테슬라사는 운전자들에게 도로 주행시에는 계속 도로에서 눈을 떼지말고 만약의 경우 사고를 피하기 위해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